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안 병 우**

1. 머리말
2. 사건의 성격과 기록화의 과정
 - 1) 사건의 성격과 변화, 그리고 기록
 - 2) 기록화의 과정 : 조직의 구성과 변화
 - 3) 기록화의 과정 : 수집활동
3. 기록화의 의의와 기록전문가
 - 1) 기록의 가치와 특성
 - 2) 기록화의 의의
 - 3)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과제
4. 맺음말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2015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글은 한국기록학회 제100회 기념 월례연구발표회(2014. 11. 8)에서 발표한 「기록학의 확장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 한신대학교 교수.

▪투고일 : 2015년 3월 17일 ▪최초심사일 : 2015년 3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7일

[국문초록]

세월호 사건은 재난사고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화는 안산의 시민들이 구성한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와 기록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가 시작하였으며, 두 단체는 가족대책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어 416기억저장소를 구성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갖는 사회적 역사적 기록이며,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고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며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건 기록화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을 수집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참여운동 기록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 세월호 기록은 진상 파악 뿐 아니라 공동체 재건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사건 기록화에서는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기록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에도 사건 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화는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록학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주제어 : 세월호, 사건 기록화,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 민주적 기록관리

1. 머리말

한국 사회에서 2014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각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성취했다는 자만에 일격을 가하기에 충분하였으며,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기록관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세월호 관련 기록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정부, 시민, 각종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었고,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 정부 기록에 대한 통제력도 갖지 못한 국가기록원이 민간 기록까지 수집 관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고, 정부와 민간이 대립 갈등하는 국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민간 기록은 시민의 손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기록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건 기록화를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을 수집하여 기억저장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고,¹⁾ 진도와 안산, 서울 등지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는 세월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기록학적 운동이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록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건의 기록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다중(多衆)이 기록을 생산하는 것과 민간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김익한, 「세월호 기억저장소를 만들자」, 『역사비평』 107호, 2014.

2. 사건의 성격과 기록화의 과정

1) 사건의 성격과 변화, 그리고 기록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로서는 해난 사고였다. 그러나 승객들이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구조대의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304명이 목숨을 잃음으로써 커다란 사건이 되었다.²⁾ 구조 과정에서 정부는 실종되었을 뿐 아니라 사고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로 인하여 사고는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 갈등은 직접 당사자인 해운회사나 정부, 피해자 가족의 차원을 넘어 참사에 공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에 분노하는 시민과 정부의 갈등으로 번졌다. 해난 사고가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변화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향후 진상 조사, 선박 인양, 배·보상과 추모사업, 붕괴된 지역공동체의 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관련 기록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 기록에는 참사 증거 기록, 피해자 개인기록, 참사 관련 공공기록, 참사 추모 기록, 피해자 단체 활동 기록, 시민 및 시민단체 활동 기록, 의무기록,³⁾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기록, 진상 조사 및 배·보상 관련 기록, 기념시설 건립에 관한 기록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 기록은 시간 차이를 두고 다양한 주체가 생산하였고, 지금도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될 것이다. 기록 생산과 관련하여 사건의 변화

2) 권명아, 「사건 이후의 인간학」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41쪽.

3) 심성보, 「사회적 기록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모색-4·16참사 기록화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와 민주주의』(2014년도 제6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 2014, 23쪽.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생산되는 기록의 주체와 종류에 차이가 있다.

첫 단계는 세월호가 출항하여 침몰하기 전까지이다. 세월호를 이용하여 인천에서 제주로 여행한 승객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였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SNS를 통해 교신하였으며, 학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행정 기록을 생산하였다. 또 선박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과 출항에 관계한 여러 기관, 그리고 항로를 안내한 진도 VTS의 기록, 선박의 항해 일지 등이 첫단계의 기록에 포함된다. 참사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기록과 피해자 개인의 기록이 중심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선박이 침몰하고 구조 활동을 벌인 때이다. 선박이 좌초한 때부터 구조가 실패할 때까지 선박과 진도 VTS를 비롯한 정부 기관 및 해운사가 교신한 기록, 해경과 어민의 구조에 관한 기록,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대응 기록, 탈출한 승객과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이 교신하거나 남긴 기록 등이 이 단계에서 생산되었다. 이 단계의 기록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력이 높은 기록이지만, 대부분이 공공기록에 속하여 민간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초기 대응 기록의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는 구조가 실패로 돌아간 뒤 국민들이 슬픔을 공감하며 추모의 분위기가 전국을 휩쓴 단계로, 추모와 진상 규명 요구 기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양된 희생자의 의무기록, 민간과 정부의 분향소 설치와 운영 기록,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와⁴⁾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

4)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은 4월 18일 '세월호 실종자 학부모대책본부' 명의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단원고 유가족대책위'를 발족하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5월 6일에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하다가 2015년 1월 25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창립하였다(황광석, 「416가족협의회 기록관리 현황」, 2015).

원회'(5. 13 결성) 등 사회단체의 활동 기록, 추도에 참여한 시민의 기록 등이 주로 생산되었다. 이 단계에서 기록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기록화는 국민적 공감과 추모 분위기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정부·정치권과 희생자 가족 및 시민이 갈등하는 단계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여야가 대립하였다. 추모 분위기는 계속되었지만, 이에 반발하는 일부 시민의 비하와 모욕 행동도 돌출하여 사회 분위기도 변화하였다. 피해자 가족과 공감하는 시민들의 단식, 가족 대책위원회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단체와 각 지역에서 벌어진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 및 이를 둘러싼 정치권, 사회의 갈등 기록이 생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19일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⁵⁾ 현재까지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피해자 대책위원회·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이 생산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아직 시작되지 못한 진상조사 활동과 추모사업, 배·보상이 시행되고, 진상 규명에 기초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 수습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진상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며, 추모기념관을 비롯한 추모공원 등의 건립⁶⁾ 기록도 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편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며, 한 단계가 완전히 마무리

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

6)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15호, 2015.1.28. 제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의 흐름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와 주체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계를 구분해보는 것은 기록화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 기록화는 모든 단계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공공기록물은 획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록전문가들의 기록화는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추모 기록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와 피해자·시민들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민간의 기록은 정부와 현격하게 다른 관점에서 생산되었다. 이들 기록물이 기록화의 주요 대상이다.

2) 기록화의 과정 : 조직의 구성과 변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 영역에서 기록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록화를 담당할 조직, 인원, 시설, 장비, 예산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기록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기록 수집과 관리 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먼저 주체와 조직 문제부터 살펴보면, 여러 지역에서 벌인 지역단위 기록화를 별개로 하면,⁷⁾ 세월호 기록 관리는 크게 두 주체가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안산 시민들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기록화를 추진하면서 결성한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이다. 시민활동가인 안산미디어공동체 김종천 대표가 이 미증유의 사건을 영상으로 기록하려는 생각을 갖고 홍영의 국민대 교수와 협의를 시작한 것이 4월 30일이

7) 지역에서도 기록을 수집하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지역공간 re:bom”을 4월 16일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었다. 두 사람은 영상기록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록물 전반을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홍 교수가 필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문을 맡아줄 것과 실무 담당 간사 추천을 부탁하였다.

마침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도 세월호 기록 수집을 결정한 뒤였고, 핵심 지역인 안산의 기록을 수집할 필요를 느끼고 있던 차였다. 게다가 한신대가 경기도에 위치하였으므로 안산의 기록 수집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 소재지의 기록을 수집하기로 한 협의회의 결정에도 부합하였다. 그리하여 5월 18일 필자와 대학원생 오운택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필자는 안산의 교사이자 한신대 박사과정생인 신대광, 김진호 선생도 참여시켰다.

기록을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⁸⁾ 정하고(이하 시민기록위원회), 홍영의 교수가 위원장, 김충천 대표가 사무국장을 맡기로 하였다. 위원회에 사무국과 영상기록단, 작가기록단, 학자기록단을 두고 261송이 시네마를 제작하는 팀이 별도로 움직였다.⁹⁾ 나중에 사진기록단이 추가되었다. ‘학자기록단’이 기록 수집과 정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한신대 이영남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가 6월 말부터는 한남대 심정보 교수가 대신하였다.

시민기록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여러 기록단은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하는 구조였지만,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움직였다. 모든 기록단에서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계속 확보하며 조직을 갖추어 나갔다.

본래 시민기록위원회는 안산에서 추진하던 ‘세월호 침몰 안산시 재난 극복 범대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로 자리잡을 예정이었으나, 지방

8) ‘세월호 참사’ 범시민기록위원회, 『제2차회의록』(2014. 6. 1). 약칭은 세월호 참사 기록단이었다.

9) 안산지역의 기록화 움직임에 대하여는 홍영의,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14년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논총』 43, 2015 참조.

선거를 거치면서 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다. 또 가족대책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¹⁰⁾ 결국 시민기록위원회는 독자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 점이 초기 활동을 어렵게 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활동을 통해 차츰 기록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가족대책위원회와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 5월 20일부터는 가족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었고, 6월 초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에 활동 거점을 마련하였다. 6월 말에는 유가족이 시민기록위원회에 합류하였으며, 7월 초에 가족대책위원회가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록’을 주요 업무의 하나로 삼았다.¹¹⁾

7월 들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기록위원회의 사무국은 국회로, 광화문으로 이동하였다. 사무국은 특별법 홍보방송팀을 운영하고 희생 학생의 미공개 영상을 편집 방영하는 등 가족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스스로 기록을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기록위원회와 세월호 시민네트워크는 가족대책위원회의 기록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¹²⁾ 그리하여 8월에 홍보와 기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보도기록팀과 기록관리팀을 구성하고, 시민기록위원회의 기록관리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결합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시민기록위원회는 조직을 유지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 등을 수행하였고, 산하의 기록단들도 그대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다른 하나는 기록전문가들이 구성한 세월호 시민아카이브 네트워크이다. 명지대 김익한 교수의 제안으로 5월 2일에 열린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세월호 관련 기록을 수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월호

10)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사건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기억과 기념’을 위한 시민기록위원회 1차 활동 계획안」.

11) 시민기록위원회, 「1차 자문회의 자료」(2014. 7. 13).

12) 시민기록위원회, 「2차 자문회의 자료」(2014. 7. 20).

관련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사건에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는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추모기록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성, 자원봉사단 결성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공주임교수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기록학 대학원에는 소재지 분향소 등의 추모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5월 10일 추모기록 자원봉사단이 결성되었고, 12일에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기록의 철저한 관리와 즉시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¹³⁾ 이 회견은 기록전문가들이 스스로 기록의 수집과 보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마침내 사건 현장과 가깝고 기록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진도의 실내체육관에서 14일 네트워크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11월말까지 지속된 진도에서의 활동은 명지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여러 대학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전남을 비롯한 각지의 기록전문가들이 동참하였다. 기록전문가협회가 권장하고 심정보 교수가 이끈 자원봉사단에도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서울광장 추모기록 보존 작업, 단원고등학교 추모기록 정리 등을 수행하였다. 여러 지역에서도 기록학 대학원이 중심이 되어 기록의 수집과 보존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월호 기록화는 6월 5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 네트워크’를 결성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이끈 김익한 교수는 진도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이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안산에 기억저장소를 만드는 작업을 벌였다.

시민네트워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안산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산을 활동의 중심지로 삼게 되었다. 안산의 시민기록위원

13)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 「세월호 참사 기록의 철저한 관리와 즉시 공개를 촉구한다」(2014. 5. 12).

회와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활동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가족대책위원회로 활동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네트워크가 마련한 기억저장소 공간 2곳과 기록관리시스템, 그리고 대용량 저장 장치가 8월 31일 가족대책위원회에 기증되었다. 네트워크와 시민기록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도 모두 가족대책위원회에 귀속되었다. 그에 따라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416기억저장소'가 가족대책위원회 산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기억저장소는 사무국과 5개팀(보도기록팀, 기록수집팀, 기록관리팀, 공동체프로그램운영팀, 총무팀)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세월호 기록화 작업은 시작되었다. 아무런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였으므로, 틀을 잡는 데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였다. 재정 등 여러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지만, 9월 초에는 안정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3) 기록화의 과정 : 수집활동

조직뿐 아니라 기록물 수집 전략의 수립과 실천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안산의 경우, 안산 시민단체 활동가가 기록화를 시작하여 가족과 접촉이 가능하였지만,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기록을 수집하기는 쉽지 않았다. 안산의 경우, 초기에는 추모 기록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손상된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로 출발하였다. 진도에서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기록위원회의 각 기록단이나 진도의 네트워크는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결과로 신뢰를 얻어갔다. 작가기록단은 유가족 인터뷰를 각종 언론 매체에 게재하여 유가족의

심정을 대신 표현하는¹⁴⁾ 한편 그들의 절절한 요구를 담아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을 기고하였고, 사진기록단은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서울광장과 진도 등지에서 ‘하늘로 간 수학여행’ 등의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사무국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영상기록단은 가족대책위원회의 각종 행사와 집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한편 ‘하늘로 간 수학여행’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그밖에도 시민기록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 안산지부의 만화전 개최나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 활동을 지원하고, 서명지 전달 행사를 기획 실천하였다.¹⁵⁾

시민기록위원회는 6월 5일 분향소에 천막부스와 컨테이너를 배정받음으로써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한 공간에 있게 됨으로써 접촉이 용이해졌다. 가족대책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중소기업연수원에 머물던 생존 학생들의 기록을 수집하였으며, 자원봉사단의 참여로 단원고등학교 안에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안산문화재단에 임시 수장고를 마련하였고, 기억저장소 공간이 확보되고 구조작업이 종결됨에 따라 11월에는 진도의 기록물을 안산으로 옮겨왔다. 3월에는 안산시의 협조로 옛 상록구청에 서고를 배정받아 분향소 컨테이너에 보관하던 기록물을 이전하였다. 아직도 ‘임시’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록물을 정리 보존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차츰 확보되었다.

수집에서 직면한 난제의 하나는 기록물, 특히 추모기록물의 산재였다. 중요 기록 생산지는 진도와 안산이었지만, 추모 기록은 전국에서 생산되었고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 전국의 기록을 수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기록학 대학원이 각기 소재지의 기록을 수집하는

14) 열 세 가족 인터뷰 결과는 올해 1월 『금요일엔 돌아오렴』(416세월호참사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지음, 창비, 2015)으로 출판되었다.

15) 이상의 활동은 홍영의, 앞의 글, 301-305쪽 참조.

방식을 마련했으나, 효용성은 떨어졌고, 그렇게 하여도 전국의 기록을 수집할 수는 없었다. 인천시청 앞에 자리잡은 일반 희생자 가족들의 기록화도 추진할 겨를이 없었다. 표본 지역을 선정하여 기록물을 수습하는 방식이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나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 기록화에 적절한 새로운 수집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3. 기록화의 의의와 기록전문가

1) 기록의 가치와 특성

세월호 사건 기록의 가치는 증거성과 역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월호의 운항 기록과 사고 발생 당시 관련 정부 기관의 대응 기록, 당사자의 기록(학생들이 보낸 문자, 영상, 유품 등), 해경과 어민의 구조 관련 기록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증거가 되는 기록이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침몰 원인을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선박의 무리한 개조와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왼쪽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은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구조 실패는 사고 발생 당시 진도 VTS 관제 담당자들이 제대로 관제하지 않고 해경 함정이 제대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았다.¹⁶⁾

16) 대검찰청,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 자료-사고원인·구조과실·실소 유주 및 해운비리·각종 의혹」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세월호 선원 재판 판결문(사건 2014고합180)」 2014. 11. 11.

사고의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원인이 명쾌하게 규명되었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가 남아 있고, 그 조사를 통해서도 의혹이 남는다면 계속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 때 탑승객들과 구조 작업 참여자들의 증언이나 영상 기록은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자들의 구술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추모와 갈등 관련 기록물은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추모 기록과 사고의 진상을 둘러싼 공방 기록, 사회적 평가를 둘러싸고 표출된 갈등의 기록, 수습 대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와 시민, 여야의 대립 기록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시민의 의식 형성과 그 수준 및 변화, 정치세력의 진영논리, 당대인의 심리 상태와 가치관, 정서를 보여주는 소중한 정치사회사 기록이다.

세월호 참사처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사건의 경우, 기록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특별법 제정 홍보를 위해, 시민의 관심 유지를 위해 기록물이 활용되었다. 서울시청 광장의 사진전 개최나 탑승한 학생들이 보낸 영상을 추가로 공개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도 따랐다. 이런 활동은 한편으로 기록물의 활용이면서 동시에 기록을 생산하는 활동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활동을 전파하기 위해 보도기록팀은 416TV를 운영하였는데, 이 방송을 통해 기록을 활용하는 한편 많은 기록을 생산하였다.

기록전문가들 자신이 때로는 기록을 생산하는 점도 사건 기록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는 다중(多衆) 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피해자와 가족, 정부 기관, 언론, 추모객들, 시민사회단체, 시민기록위원회 소속의 작가기록단, 사진기록단, 영상기록단 등이 문서, SNS, 사진, 영상, 리본, 추모사, 인터뷰와 르뽀 등을 생산하였고, 화가들은 그림, 시인은 시를 남겼다. 모든 사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시민기록위원회 소속의 기록

단이 많은 기록을 생산하였다.

세월호 기록은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특성이 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4월이 돌아오면 추모의 물결이 다시 전국을 휩쓸 것이다. 세월호 기록은 아직도 생산 중이고 앞으로도, 얼마일지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계속 생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수집 활동과 그 전략이 필요하다.

2) 기록화의 의의

세월호 사건의 기록화에서는 사건 당사자 가운데서 피해자의 기록과 시민의 기록을 수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사건 기록화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의 기록을 다양한 관점, 특히 비주류적 시각에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된다. 즉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피해자나 약자, 소수자의 행위와 생각을 남길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며, 이는 열린사회의 중요한 요소이고 민주적인 기록관리의 핵심의 하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기록이 편견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학이나 기록학에서는 상식이다. 기록자가 고의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기록은 사건의 일면을 보여줄 뿐이며, 기록을 통해 사건을 완전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건을 완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기록, 다양한 관점에서 생산된 기록을 활용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아니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생산된 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월호 기록화를 통해 증거력이 높은 기록을 획득하고 싶지만, 그러

한 증거 기록은 대부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증거력을 가진 기록으로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구조되었거나 희생된 승객의 증언과 동영상 기록, 그리고 구조에 참여한 어부들과 해경의 진술 등이다. 세월호의 경우처럼 사건의 기록화에서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록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공공기록이 담지 못하는 내용, 즉 피해자의 절절한 심정과 충격의 극복 과정, 전 국민의 분노와 공감, 추모의 열기, 시민의 집단적 요구, 반발하고 비하하는 반대 시민의 심성을 기록화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표출된 다양한 대응 양식과 시민의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다른 관점에서 생산되고 보존되는 기록들과 함께 온전한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월호 사건 기록화는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동시대의 기록화라는 속성을 갖는다.¹⁷⁾ 피해자와 시민들이 추모 행사나 진상 규명 요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기록전문가들이 능동적으로 기록화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사회참여운동 기록화의 성격도 있다.¹⁸⁾ 또한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단원고가 있는 안산에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했으므로, 안산이라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도 띤다.

세월호 아카이브는 지역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될 것이다. 안산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당한 기록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지역아카이브로서, 시민의 관점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기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¹⁹⁾ 붕괴된 공동체를 복원하

17) 김명훈, 「기억과 기록 :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호, 2014; 이승영,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호, 2014.

18) 이현정,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호, 2014.

거나 사고 이전과는 질이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세월호 아카이브는 안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의식공유공동체의 아카이브가 되고, 피해자들의 기억저장소를 넘어 전국민의 기억저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재난사고를 경험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와 기업, 시민과 교육 현장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발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

세월호 기록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침몰 사건의 진상 파악,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 강구, 인명 희생에 대한 애도와 공분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월호 아카이브는 기억 투쟁의 근거지로서 기능할 것이다. 침몰에서부터 구조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정부의 사후 대처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들의 이해는 정부와 상이한 점이 많다.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는 피해자와 시민들은 다른 기억을 갖게 되었다. 수사 결과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자본의 끝없는 탐욕과 그것을 규제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인명 경시 의식과 선장을 비롯한 선원과 구조 책임자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있으며, 이런 원인이 국민이 위협에 처하였을 때 국가가 실종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와 국가의 구조적 문제이다.¹⁹⁾ 따라서 구조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정부는 피상적 조사와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쳤다. 세월호 기록은 이러한 현실을 폭로하고 기억하여 안전 사회를 구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세월호 기록화에는 기록인 이외에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기억저장소를 확보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는 아름다운재단과 새

19) 설문원,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 밀양 송전탑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호, 2014, 296쪽.

20) 박명림, 「세월호 정치의 표층과 심부—인간, 사회, 제도」, 『역사비평』 110호, 2015.

로운 건축사협의회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으며, 시스템 구축과 대용량 데이터 수집 도구와 플랫폼 구축에는 다음세대재단과 엠군(mgoon), 아르고넷 같은 기업이 도움을 주었다.²¹⁾ 자원봉사자들은 시시때때로 필요한 곳에서 기록물의 수집과 정리에 참여하였으며,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시민참여의 형태로 진행된 점이 세월호 기록화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높여준다.

3) 기록전문가의 역할과 과제

사건 기록화에서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과정은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이 갖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판단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하나는 기록전문가의 사건 기록화가 정부의 기록화에 대항하는 사회적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영향이 큰 역사적 사건, 시민의 기본권 및 생존권과 관계되면서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여 한쪽 당사자의 기록만으로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기록화의 우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로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²²⁾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들 수 있겠다.²³⁾

신뢰성 부족과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로 국가적 재난이었는데, 국가

21) 김익한,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기억저장소의 진화」, 『프레스리안』, 2014. 12. 30.

22) 신윤창, 안치순, 「사회갈등에 관한 스토리텔링적 담론분석: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3), 2012.

23) 설문원, 앞의 글, 2014;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2014.

적 참사로 보는 시각과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였으며, 침몰과 구조 실패에 대한 의혹과 사후 대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조 실패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은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파기한 정황이 드러나 정부 기록의 신뢰성은 추락되었다. 정부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기록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어 추모 기록이 전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이들 기록은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멸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정부 각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조사 선별하고 사건 발생 후에 생산될 관련 기록의 선행적 보존 조치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사용될 기록을 모아 영구보존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지 않은 국가기록원이²⁴⁾ 이들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활용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시민의 활동은 민간의 기록화를 통해 보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기록화는 정부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도 갖는다.

사건의 성격과 중요성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는 기록화 여부 판단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비조사는 유사한 성격의 사건을 시계열적 맥락에서 조사하는 방법과 사건의 성질은 다르더라도 비슷한 영향을 끼친 사건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사한 해난사고로 남영호 침몰 사고(1970. 12. 15. 319명 사망)와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1993. 10. 10. 292명 사망)를 들 수 있다. 공교롭게도 20여 년 간격으로 발생한 대형 해난사고의 원인은 세월호와 유사했다. 직접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 기상과 운항 부주의, 부적절한 대처와 구조였으며, 간접 원인(배경)은 선박 회사의 영세성과 과도한 이윤 추구로 인한 일상적 과적, 선박의 구조와 안전 설비 미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감독 소홀과 규제 완화였다. 근본 원인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생명을 경시하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욕망과 인간의

24) 이승억, 앞의 글, 187쪽.

전도된 가치관,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대형 해난 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반복하여 발생했음에도 우리는 그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였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는 감독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런 점에서 세월호를 비롯한 대형 해난사고는 구조의 문제이다.²⁵⁾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은 철저히 기록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월호 기록화가 필요한 절실한 이유이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분석은 수집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월호처럼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이었다. 세월호 사건에서처럼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애도와 분노, 추모의 분위기가 넘쳤다. 기록학계에서는 전국의 추모 기록물을 수집하여 정리한 후 노무현재단에 기증한 바 있다. 사건의 성질은 다르지만, 전국에 걸쳐 추모와 애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기록이 생산된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사건 기록화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기록화는 기록전문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그 동안 기록전문가의 활동 영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서 각종 공동체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빙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왔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돌발 사건의 기록화도 기록학 영역 확장의 한 형태인 셈이다. 돌발 사건에 대하여 기록전문가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번에 경험하였듯이, 사건의 기록화는 참여의식을 가진 기록전문가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사건 기록화는 기록전문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벽찬 과제이다. 사건기록화를 위해서는 기록전문가들 혹은 관련 조직의 참여가 요구되며, 추진 주체의 건설이

25) 박명립, 앞의 글, 8쪽.

필요하다. 세월호 기록화에는 기록관리 관련 여러 단체와 기록전문가 뿐 아니라 안산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월가점령운동 기록화나 세월호 기록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운동(Archival Activism, Archivism)을²⁶⁾ 추구하는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직하다. 평소에는 사건기록화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며, 관심 있는 기록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을 담당하며, 사안이 발생하면 기록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책임을 맡는 것이다. 기록화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록화팀을 구성하여 시동을 걸고, 과정을 조정 통제하며, 기록화 결과를 정리 평가하여 다음을 위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또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히 기록화하기 위하여 기록전문가의 교육 과정에 사건 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²⁷⁾ 사건 기록화는 이미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식과 거시적 선별평가의 틀에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기록을 수집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사건 기록화에 임하는 기록전문가에게 객관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월호의 경우, 기록화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시작할 때부터 수집하는 기록은 가족들에게 헌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조직상으로도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산하에 위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점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기록 자체가 결코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중립적 산물이 아니라는²⁸⁾ 점과 함께 기록전문가도 그가 속한 조직이나 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6) 이현정, 앞의 글, 2014.

27) 한국기록학회 발표에서 이소연 교수가 제안하였다. 토론에 감사드린다.

28) 김명훈, 앞의 글, 2014, 19쪽.

기록전문가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의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록전문가나 하나의 기록관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원적 주체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록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록전문가와 기록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길은 다원적 주체가 생산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화하여 다양한 기록관에 보존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일 수 있다. 다원적 주체가 생산하므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며, 자연히 기록의 가치는 상대화된다. 그러므로 총체적 기록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성취될 수 있다는²⁹⁾ 데 동의하며, 세월호 기록화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기록관리 분야는 그 동안 공공기록 관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기록 관리만으로 민주주의가 원숙하게 발전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사회이므로, 다원적 주체가 생산한 다양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록학이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건처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사건 기록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기록화와 그를 기초로 한 다양한 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은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기록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³⁰⁾ 이것은 다원사회의 기록학적 구현이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 설문원, 앞의 글, 2014, 300-301쪽.

30) 박건홍,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선인, 2014, 262쪽.

4. 맺음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누구나 바랐다. 그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추도이자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된 점이나 국민의 54.5%가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좋아지지 않았다”고³¹⁾ 생각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한국 사회는 각성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건 기록화를 시작할 때는 기록물을 수집하여 기록관(기억저장소)를 만들어 보존 활용하겠다는 큰 방향은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기억저장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태가 최선은 아니고 완성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기 전망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의 행로는 대략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현행 기억저장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 가족과 민간이 기록을 보존 활용하여 기억을 간직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될 ‘추모기념관’에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이 수집하는³²⁾ 기록과 함께 보존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장기지속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추모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이 피해자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검토해볼

31) 환경매일신문, 2015. 2. 4, 「경기개발연구원, 국민 절반 이상, “안전인식과 대응 좋아지지 않음”」.

3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지금 걸어온 길보다 더 멀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기록과 기억저장소가 진실 규명, 올바른 기억의 형성과 유지,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 안전한 사회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 길은 가깝고 즐거운 여정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rocess of Archiving Sewol Accident and its Meaning

Ahn, Byung Woo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has not only induced an intense conflict in Korean society but also been developed into a sociopolitical issue. This paper divides this accident into five stages and examines the records produced at each stage. *The Sewolho Citizen Archive Network* and *the Ansan Citizen Record Committee* began the archiving of Sewol and created the *416 Archives*. The records of Sewol are social and political records that hold evidencial and historical value. They can be used to rebuild and recover the wounded community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truth behind the case.

Accident archiving collects materials different to the ones which public archiving does, allowing people to view the incident from a different standpoint. It is also characterized as an archiving of the current issue, social movement and regional community. Accident archiving is a method which ensures credibility and impartiality in memory. In light of Sewol archives, accident archiving can contribute to form mature democracy.

Key words : Sewol Ferry, Accident archiving, Ansan Citizen Record Committee, Sewolho Citizen Archive Network, democratic record management, 416 archives

